

제2장 개념 정의관계는 지배관계이다: 누가 무엇이 리스크인지 결정하는가

1. 리스크는 시간을 초월하는가

위험사회 개념 개진을 위한 출발점-몇몇 이의 제기와 비판적 질문; 리스크는 항상 있었고 그래서 어느 특정 시대의 성격으로 내세우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 리스크는 인류만큼 오래되지 않았는가?
- 모든 생명은 매 순간 닦칠 수 있는 죽음의 리스크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닌가? 모든 시대의 사회는 '위험사회'가 아니던가?
-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발전한 산업사회가 역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이점들(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물품, 이동 가능성)의 이면, 즉 필수 불가결한 '잔여 리스크'가 아닌가?

2. 리스크 계산: 열린 미래 앞에서 예측할 수 있는 안전

; 현대화 과정이 산출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리스크 계산'에 대해 서술.

전통적 리스크와 현대적 리스크의 근본 차이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의도적인 결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산을 근거로 내려지는 결정인데, 여기서 위험은 진보의 불가피한 결함으로 여겨진다.

즉 이 위험은 운명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것, 인간의 손과 머리의 합작품인데, 기술 지식과 경제적 이익 계산의 결합에서 나온다.

따라서 산업적으로 큰 리스크의 경우 늘 "사회는 닦친 재앙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라는 귀책 문제가 대두된다.¹⁾

리스크 계산의 이점. 1. 언제나 '개인화되어'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사고 확률의 형태로)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리스크가 열어주었다.

2. 보험 지급은 귀책 사유와는 무관하게 약정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원인을 둘러싼 법적 분

1) 현대사회의 주요 위험의 특징은 그것이 자연재해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발전소나 송전탑이든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든 인간이 만든 과학 기술과 제도에 의해 매개되어 발생한다. 그렇게 때문에 위험은 그것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사회제도의 문제이자 현대사회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가 된다. 올리히 벡은 바로 이러한 현대사회의 성격을 설명해온 대표적인 학자이다. 박희제, 「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 올리히 벡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국의 사회학」, 『사회사상과 문화』 제30집, 2014, 84쪽.

쟁은 성립되지 않고 도덕적 분노는 악화된다. 그 대신 보험 비용의 정도는 기업가에게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

리스크 계산을 통해 산업 시스템은 자신의 먼 미래와 관련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진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 상태를 예상하고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든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의 계산을 허용한다.

각론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은 시스템, 즉 사회적 귀책규칙과 보상규칙, 예방규칙 시스템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현재의 안전을 만들어낸다.

실존의 구석구석마다 불확실성을 드리우는 현대는 공적이고 사적인 보험계약의 타래에서 풀려 나온 '사회 계약', 즉 산업이 산출한 불확실성과 파괴에 대비한 사회계약에서 그 반대 원칙을 발견한다. 이 사회계약이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활성화하고 부활한다.

위험과 위험사회의 구상은 이전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 사회와 자연, 사회과학과 물질과학, 리스크의 담론적 구성과 물리적 위험을 결합한다. 위험사회 이론은 제2현대의 생태학적·기술적·물질적 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든 사회밖에 없는 사회학의 자기중심성과 자기만족을 깬다.

리스크의 존재론은 종종 결합할 수 없는 다양한 합리성 주장들을 모두 결합하여 "서로 모순적인 확실성"(Schwarz/Thompson 1990)에 대항하는 논증을 펼치고 또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한다.

3. 리스크와 위험: 조직적인 무책임성

; 그런 식의 통제가 글로벌 리스크의 경우 성공하지 못한다

유전공학적·인간유전학적 변화, 제한할 수 없는 정보의 홍수, 금융시스템의 붕괴, 테러와 생태학적 파괴 등의 현실적 도전에 직면하여 국민국가의 단위에서 개진된 기존 위험론의 토대는 무너진다(Beck 1988, 1999).

산업사회는 20세기 후반부터 인간에 의한 지상 위의 모든 생명의 자기파괴라는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종류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ex) 핵과 화학무기의 시대, 유전자와 테러의 시대.

핵발전은 경제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의학적·심리학적·문화적·종교적 의미에서의 모든 보험원칙을 무효화했다. '잔여위험사회'는 보험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보험을 통한 보호는 역설적으로도 위험의 크기와 함께 줄어든다.

큰 위험은 리스크 계산을 지탱하는 세 기둥을 무너뜨린다.

1.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
2. 결과를 예상하여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위험에 대한 정상 기준, 측량 방법, 이들을 통한 계산의 토대 등이 사용 불능으로 입증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비교되며, 계산은 은폐로 둔갑한다.

즉 '조직적인 무책임'이 나타난다.

그것은 “세기의 혼동”(Anders) 때문이다. 21세기 초의 도전을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산업 사회 얻은 개념과 처방으로 다스리려 한 것이다. 우리에게 닥친 위험은 위험을 통제하려는 안전 약속이 처음 등장한 세기와는 다른 세기의 산물이다.

리스크와 위험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 준거가 있는가? ('계산할 수 있는' 리스크와 통제할 수 없는 위험 가르는 경계).

경제 자체는 강요할 수 없는 영역의 경계를 경제학적으로 정밀하게 표시한다. 민간 경제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그 경계이다.

역사적 발전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노선(기술적·관료적 규범과 통제의 완벽화에 근거하는 높은 안전 수준 / 법·기술·정치적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역사적으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위험 확산)이 유럽에서 충돌한다.

기술과는 상관없는 이런 사회적·정치적 모순은 과거의 산업적 합리성과 통제 표준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큰 리스크는 물리적 폭발력과 함께 사회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위험이 등장하면서 그 위험을 다룰 권한을 가졌다가 또 어떤 때는 박탈당하는 제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운 안전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험 인정의 다른 측면은 위험의 부재에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찾는 제도의 실패이다.

따라서 위험의 '사회적 탄생'은 극적이고 외상이 크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된다.

4. 지배관계로서의 개념 정의관계: 누가 무엇이 리스크인지 결정하는가

; 리스크의 실제 연출은 사회적 인정을 전제한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k)의 '생산관계'와 유사하게 개념 정의관계는 리스크 연출의 지배관계로 이해해야 한다.²⁾

세계는 현대사회의 승리(더 많은 산업, 새로운 기술)에서 비롯된 메가-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법·과학·정치에서 현재 통용되는 원칙에 따라 제도화된 국가적 안전 약속에 의해 그것을 적절하게 증명할 수도 없고, 그 원인을 규명하거나 보상할 수도 또 (예방차원에서) 관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위험사회의 모순이다.

리스크는 실제 일어날 수 있지만 꼭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한 비현실성의 이미지가 따라다닌다.

2) 벡이 위험사회라고 이름붙인 이 새로운 시대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산업화를 통해 만들어진 위험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고 분배(회피)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해결이 사회제도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즉 위험 거버넌스가 후기 근대사회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이다. (위의 글, 87쪽)

리스크는 상응하는 개념 정의관계의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구성과 개념 정의이다. 그것은 (과학적인 그리고 대안과학적인) 지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리스크는 개념 정의에 관한 특정 권력관계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개념 정의 투쟁, 개념 정의 갈등이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성공적인) 연출 결과이다.

이런 점은 '리스크 생산국'과 '리스크 수용국' 간의 국제관계에서 명확해진다. 국가나 대륙 간의 관계에서 '수출'되는 위험은 기존의 확립된 사회구성에 따라 '잠재적 부작용'으로 간주된다.

모든 범죄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원칙에 근거한 법규범이 국민국가에서는 책임부과를 방해하지만, 국경을 넘어 위험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법규범이 없거나 더 정확하게는 법규범의 효력 발생한계 때문에 상대국가의 위험이나 파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자신들과 상관없는 비현실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부작용적 성격뿐만 아니라 부작용 자체의 소멸은 (이미 말했듯이 법의 국민국가적 유효성과 연관되는) 위험의 '비가시적인'·'잠재적인' 수출을 가능하게 만든다.

어떤 나라에서 (그곳의 지배적인 개념 정의관계와 문화적 인지에 따라) 위험하다고 비난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로 무해하다고 여겨진다.³⁾

개념 정의 관계라는 관점을 구성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이론 측면에서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르크스가 '생산관계'라 이해한 것이 위험사회에서는 '개념 정의관계'이다.

두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배관계이다(Beck 1988; Goldblatt 1993). 어느 특정 맥락에서 (예컨대 국민국가 안에서,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리스크의 확인과 인정을 규정하는 규칙, 제도과 능력이 이 개념 정의관계에 속한다.

'개념 정의관계'와 '생산관계'의 공통점은 우선 둘 다 베버가 말한 의미에서의 지배 형태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여기나 저기나 제도화된 규범은 어느 특정 집단에게 자신들의 해석과 이익을 다른 집단의 의지에 맞서 관철할 수 있는 권력 기회를 열어준다.

'개념 정의관계'도 '개념 정의 수단'에 대한-과학적·법적 규정들-사용권에 근거한다.

전문가와 법관은 모든 시민 대표로서 서로 경쟁하는 '위험 개념 정의들'과 거기서 도출되는 책임 및 보상 요구 가운데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을지 결정한다. 그 밑바

3) 각 국가의 역사적, 제도적 경험에 따라 특정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지는데, 특히 위험을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같은 위험이 국가와 문화별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고 각각 다른 정도로 사실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례로 유럽의 경우 기후변화나 유전자변형식품 같은 환경 위험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기초해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히스테리적인 반응으로 격하한다. 하지만 테러에 대해서는 미국이 유럽보다 오히려 민간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95~96쪽)

닥에는 분명한 지식 위계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

생산관계와 개념 정의관계의 다른 공통점은 그것들이 두 단계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응집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첫 단계에서는 모두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 지배의 근거가 되는 규칙들은 철옹성 같은 자명함을 상실하고 탈마법화되고 정치화된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기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어쨌든 공론화된 갈등의 뜨거운 열기와 강한 바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관계’와 ‘개념 정의관계’의 차이는 생산관계는 경제와 노동, 생산 영역에서 그 언어로 표출되는 데 반해 개념 정의관계는 전통과 공론 영역, 과학 법과 정치 영역에서 해당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노동사회의 ‘갈등논리’가 중요하고, 후자에서는 담론 사회의 ‘갈등논리’가 부각된다.

생산관계와 개념 정의관계는 결정론적 관계가 아니며, 그 사이에는 어떤 친화성도 없다. 있다면 산업적이고 국민국가적인 제1현대의 조건 아래에 생산관계와 개념 정의관계가 역사적으로 서로 얽혀 발전해왔다는 정도의 연관관계가 있을 뿐이다.

5. 위험사회에서 기술과 자연과학의 역할

지배적인 개념 정의관계는 기술과 자연과학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들은 (대항-전문가나 대안학자들이 아니라 주류 학자들)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여 무엇을 허용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없는지를 여론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다.

우리가 문제에 접근할 때 필요한 핵심적 통찰은 다음과 같다. 위험이란 문제에서는 누구도 전문가가 될 수 없다-전문가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다.⁴⁾

리스크 예측은 이중으로 불명료한 상관관계를 함축한다.

첫째, 리스크 예측은 반드시 문화적 수용자를 전제해야 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잠재적인 피해의 거부와 용인은 이어줄 과학적 다리는 없다. 수용할 만한 리스크는 수용된 리스크이다.

둘째, 새로운 지식은 하루아침에 위험에서 정상 상태로 변할 수 있다. 핵에너지와 오존구멍이 그 대표적 예이다. 다시 말해 과학의 진보는 과학이 원래 주장한 안전을 반증한다. 과학의 리스크 진술에 대한 회의의 싹을 키우는 것은 과학의 성공 자체이다.

4) 근대사회에서는 위험의 정의가 전문가와 국가에 맡겨져 있었다면 세계위험사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위험을 정의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위험을 정의하는 지시 그이 위계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적 테러와 같은 글로벌 위험을 정의하는데 있어 전문지식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과거 위험정의에 있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던 전문가들의 지식과 일반시민들, 특히 실제 위험의 피해자들의 지식과 경험이 평등한 발언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위의 글, 95쪽)

그러나 그 반대도 유효하다. 심각한 위험은 하필이면 그 원인 제공자에게 해석의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런 모순은 밝혀져야 한다.

즉 한편으로 기술과학은 자신이 내린 리스크 진단과는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그 진단 자체를 부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술과학은 끊임없이 제국 시절의 유물인 독점권, 자신들의 내재적 척도에 따라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질문-얼마나 안전해야 충분히 안전한가-에 답할 수 있는 독점권을 행사한다.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이 자신들이 생산한 위험을 처리하면서 ‘현실성 위기’에 빠지는 것도 기술자와 과학자가 소유한 위험 진단에 대한 독점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기술과학은 항상 개연적인 안전에 대한 재량권만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진술은 설령 내일 두세 기의 핵발전소가 폭발해도 여전히 진리도 남는다. 과거에 과학이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던 시대가 있었다. 즉 시간과 공간이 제약된 실험실 과학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동안 전 지구가 실험실이 되었다.

유전적으로 조작된 식물의 유동성은 실험지역과 가능한 결과와 위험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⁵⁾

6. 사회의 생태학적 갈등

; 사회에서 일어나는 생태학적 갈등을 서술

제어할 수 없는 글로벌 시스템 위험이 합법화되고 정상화됨으로써 어떤 정치적 역동성과 어떤 사회구조,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가?

좀 거친 공식으로 표현하면 답은 다음과 같다. 궁핍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지만, 글로벌 위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굶주림에는 위계질서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모두가 굶주린 것은 아니다. 반면 지구 온난화는 평등하고, 그런 점에서 ‘민주적’이다(물론 그 결과는 지역적으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글로벌 위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타자의 종말’이고, 우리의 모든 세련된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위험이 가진 새로운 세계주의의 힘)

5) 위험사회의 위험은 과학기술과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해 산업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역설적으로 위험사회는 근대의 실패가 아니라 근대의 급진화가 낳은 결과이다. 그런데 위험이 결정을 수반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회 제도의 정당성에 큰 위험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기술이다. ……

과학기술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주는 힘의 원천이라는 서사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은 대중의 참여나 그들의 대표자로부터의 관리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웠고, 과학과 진보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과학기술 전문가주의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부터 파생된 위험은 이러한 정당성의근간을 위협한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 과학기술은 “문제의 해결책의 원천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88~89쪽)

글로벌 위험은, 국민국가 안 또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모든 보호 구역과 사회적 분화를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위험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이끌어낸다.

미래의 최전선에서 산업문명은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국가 간 경기’로 변한다. **세계의 극빈자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들이 환경변화에 적응을 가장 잘 못할 것이다.**⁶⁾

세계경제가 리스크로 이익을 보는 자와 손실을 보는 자로 나누어지면, 이런 양극화는 고용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갈등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면서 업종별로 과거의 계급적 적이었던 자본과 노동이 **동맹**을 이룰 수 있다. 이 동맹은 계급 대립을 넘어 노사 블록과 다른 혼합 분파와의 대결로 귀결될 수 있다.

계급 대립은 ‘생태학적 정치화’의 압력 때문에 후퇴한다. 그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노동운동은 능률에 대한 자부심, 노동의 사용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푼 상태에서 잠재적인 위험 개념을 만난다.

위험의 사회적 연출과 역학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는 위험사회의 정체를 세계주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7. 테러 리스크는 국제정치의 토대를 바꾼다

: 어떤 방식으로 테러 리스크가 국제정치의 토대를 변화시키는가 묘사

자살 테러 역시-좀 변형된 형태로- 이런 세계주의 차원에 도달했다. 자살 테러는 (가능한) 위험과 (닥친) 재앙의 차이를 적절하게 이용한다.

의도적으로 야기한 재앙의 참혹한 증거와 언론을 통한 연출이 없다면 재앙의 예상-이것이 테러 리스크의 핵심이다-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사건에 불과했을 것이다.

재앙 자체는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고 분명한 시작과 끝이

6) 세계위험사회론은 위험사회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성과 위험의 불평등을 강조한다. …… 세계위험사회론은 글로벌 위험의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집단별, 국가별로 달라지는 상황에 주목한다. 나아가 이러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의 차이를 국가 내에서나 지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권력관계의 산물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불평등과 갈등을 분석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가난한 국가가 경험하는 글로벌 위험의 불평등은 두 가지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

하나는 공간적인 차원으로 남북관계에 따른 위험 불평등의 국제적 위계질서에 대한 인식이다. 벡은 이를 상류-하류 불평등이라는 은유로 설명하는데, 산업주의를 펼치는 강 상류의 국가들은 위험 생산국이지만 동시에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듯 산업화의 부작용인 위험을 강 하류 가난한 국가들로 전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강 하류에 위치한 가난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위험을 수용하게 되는 반면, 강 상류의 경제 선진국들은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책을 세울 동기가 약해진다.

다른 하나는 시간적 차원과 중첩되는데, 아직 산업화가 덜 진전된 주변부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현대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험의 국제적 위계질서에 의해 글로벌 산업화의 부작용은 이미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위의글, 96~97쪽)

있다.

그러나 테러 리스크, 즉 재앙을 연출하고 예상하는 경우 이 말은 맞지 **않다**.

테러 위협의 글로벌화는 우선 가능한 테러 암살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지구상 어느 곳에서 아무 때나 일어날지 모른다는 **예상**의 세계화로 나타난다.

양극 질서가 붕괴된 이후, 우리는 적의 세계에서 위협과 리스크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점점 더 강하게 연출되고 인식되는 글로벌 위험사회의 위험은 탈국가적인 다른 안전 패러다임에서 유래한다.

제1현대의 국민국가적 안전 의제와 제2현대의 탈국가적 새로운 안전의제의 차이는 **무지가 지배하는 체제**이다. 알고 있는 무지뿐만 아니라 정말 모르는 무지-‘우리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unbekanntes Un-bekanntes)의 체계, 즉 존재론적 안전의 붕괴가 상황을 악화한다.

대표적인 안전 예측의 단위-행위자, 의도, 잠재력- 가운데 적어도 한 단위를 알 수 없을 때, 존재론적 안전은 사라진다.

확인하기 힘든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는 마치 ‘폭력 NGO’ 같다. 그들은 시민사회의 재야조직처럼 탈지역적이고 탈중양적이다. 그런 점에서 테러가 만연한 글로벌 위험사회는 반국가적 위협 정국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정국에서 비상상태는 정상이 되고, **그래서** 국가는 무력해지는 동시에 (기존의 수단이 소용없기 때문에) 전권이 주어진다.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결과로서 재앙은 (예를 들면 기후변화) 국가의 안전 보장을 부정하고, 심지어 안전 보장인을 공적 안전을 위협하는 자로 보이게 하며, 국가의 권위와 정당성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의도된 재앙이라는 테러 리스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글로벌 테러에 대한-글로벌 금융위기, 기후변화,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일한 대응은 국제적 협력이다.

글로벌 리스크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정치를 강요한다. 그것은 **원칙적 통제 불가와 실제적 통제 불능**을 구분하라고 요구한다.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는 (경우에 따라서 초국적 기업도) 대항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대항행동에 대한 기대는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현실에 반하는 통제 가능 가설을 전제로 한다.

공인된 리스크를 눈앞에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 행위가 위험을 줄이든 키우든 아무 효과가 없든 상관없다. 특히 테러 리스크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리스크의 익명성을 깨야만 하고, 글로벌 리스크는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 거기에 맞는 정치적 도구와 제도를 고안해내야 한다. 이때 정치적 행동 형태의 가치 위계질서가 생겨난다. 선제적 행동 정치는 높게 평가되고, 반사적 행동 정치는 낮게 평가된다.

8. 정치적 성찰성: 위험의 대항권력과 사회운동의 기회

: '위험의 대항권력'과 시민사회운동의 성공 기회에 대해 질문

물론 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현대사회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한편으로 자기파괴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논증이 옳다고 설득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수 있고 제도가 우세할지 모른다는 약간의 기대감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

또한 사회운동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참작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것은 위험의 대항권력이 이 모든 것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위험은 자신을 부정하는 해석과는 상관없이 늘 상존하고 지속적이다.

위험에 맞설 수 있는 대항권력은 위험 잠재력의 (활성화할 수 있는) 정치적 성찰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다.

핵에너지라는 세계 실험은 (위험화학, 유전공학, 가상현실의 기술 등) 그동안 자기비판의 역할을 스스로 맡아 정치적 반대 운동보다 더 설득력 있게 더 효과적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핵에너지 비판자는 (유전공학 산업 등) 건설 현장의 울타리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비판여론이 (아무리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위험 산업의 가장 막강한 적은 바로 위험 산업 자신이다.

시민사회운동의 힘은 그 자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 사회에서 위험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제도들과 연관된 모순들의 질과 범위에서도 얻어진다.

위험의 마스크를 억지로 벗기는 이 대항권력의 존재는 물론 사회적 기본 여건에 달려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적으로 가장 경이롭고 놀랍지만, 아마 가장 이해를 받지 못한 현상-비단 독일뿐만 아니라-은 **개인화**이다.⁷⁾ 즉 제도 내부와 외부에서 '거대한 주체성'이 뜻하지 않게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것이다.

7) 백의 이론체계가 사회구조의 모순과 위기를 위험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모순 극복을 위한 행위주체로 성찰적 개인을 설정하며, 성찰적 근대라는 미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글, 86쪽)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와 운동이 주도권을 잡았다.⁸⁾ 1970년대부터 기존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의 위험을 의사 일정에 올린 이는 바로 그들이다. 민주적 전복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주제의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생태학적 확장이란 일반의 목소리와 권력이 합심하여 '제도판 위에서 고안된' 사회의 위험한 가짜 안전에 맞서 정치와 법, 공론 영역, 일상의 독립성을 확장하는 데 승부수를 거는 것이다.

서로 맞물려 있는 두 원칙이 제안의 주된 내용이다. 첫째, 권력분립의 관철이고, 둘째, 공론 영역의 창출이다. (강하고 유능하며 과학적 논증으로 '장전된' 공적 토론)

사회와 관련된 논쟁과 위원회에서 반대 목소리와 대항 전문가, 다양한 학제 간 공동작업, 그리고 특히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대안들이 서로 연합하여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위험을 공적으로 가시화하고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관심을 일깨우는 것-이것이 문화적 눈이고, 이 눈을 통해 '눈먼 시민'은 아마 자기 판단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다.

8) 국제적인 위험 불평등과 갈등에 대한 논의는 곧바로 사회학이 방법론적 일국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세계위험사회에서 위험이 국경을 넘나들고, 위계적인 글로벌한 권력관계에 의해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국민국가뿐 아니라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위험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학은 위험의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피해자 사이의 경계 그리고 영토적·경제적·사회적 경계의 불일치에 주목하고,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권력과 대항권력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위의글, 98쪽)